



눈썰매 즐기는 시민들 12일 제주시 오라동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진입로에서 시민들이 눈썰매를 타고 있다. 강희만기자

여성 농민의 해...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도, 17개 사업 321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여성 농업인의 소득·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17개 사업에 총 321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 세계 여성 농민의 해를 맞아 여성 농업인 지원을 더 두텁게 한다는 설명이다. 올 한 해 제주에서는 여성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10개 사업에 257억9600만원을 투입한다. 복지·문화·건강 증진을

위한 7개 사업에는 63억1514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농민수당 지원 금액은 1인 경영체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공동 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여성 농업인 행복이용권은 1인당 20만원을 NH농협은행 바우처로 지급한다. 농촌 현장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선 1억3340만원을 들여 농업 현장 화장실 4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제주~칭다오 투자심사 패스 논란... 의견 엇갈려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받아야” VS “안 받아도 돼”
최종 판단 법제처로... 이르면 이번주 유권해석 의뢰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손실 보전금 지급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견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고문변호사 2명을 상대로 한 법률 자문에서 A변호사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재정 지출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B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는 지자체가 각종 재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증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양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와 맺은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이 행위는 장래에 세출예산으로 잡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 가령 지자체가 특정시점에 모 업체와 계약을 맺어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하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면, 이는 당시 시점상 그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계약에 의해 의무

적으로 추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외의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도는 칭다오 선사 측이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배’로 다니는 등 손실을 보면 3년간 최대 228억원을 보전하기로 협정을 맺은 상태다.

도는 그동안 칭다오 선사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도가 근거로 든 조례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에는 해상 운송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도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지방재정법은 예산 외의 부담행위 중 ‘조례에 규정된 것’은 투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B변호사는 도의 이런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반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A변호사는 조례는 포괄적 지원 규정으로 명확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A변호사의 유권해석 취지가 결국 도의 재정 지출 행위가 위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투자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질의했을 뿐 위법·적법성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변호사 회신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도는 법률 자문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자 보다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법제처 회신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야생조류서 옮겨울 첫 고병원성AI... 농가 전파 없어

성산읍 시흥리 분변 검출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
주변 사육농가 16곳 오는 27일까지 이동제한 조치

제주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옮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안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0일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제주시 한경면 웅수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도 AI항원이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옮겨울 들어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가 농장 전파로까지 이어지면 가금류를 매몰하는 살처분에 나선다.

제주에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매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다.

2021년을 마지막으로 도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옮겨울 유행하는 AI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과 전파력이 10배 이상 높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는 옮겨울 첫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성산읍 시흥리 해안가로부터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방지역’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반경 10km 이내의 가금 농장 16곳에서 58만9000여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16곳 농가들은 오는 27일까지 임

상 예찰과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다.

도는 긴급 예찰 결과 16곳 농장에서 AI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는 고병원성 AI의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축산차량 진입과 축산관계자 통행을 차단하는 방역 장비를 동원해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가금 농가는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들도 야생조류를 통한 AI 전파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주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세기건설과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임직원 모두는 더 행복한 제주를 위해 새롭게 꿈꾸고 힘차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2026년이 되기를 세기건설이 응원하겠습니다.

世紀建設株式會社